

‘김민석 임명동의안’ 통과… ‘상법개정안’도 與野 합의 처리

野, 김민석 임명동의안 표결 불참
나경원 “李 정권 견제 싸움 지속”
상법개정안 與野 합의 통과에도
일각서 ‘자본시장 위축’ 우려 제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민석 후보자 인준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김민석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붙여 179표 가운데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의결했다. 김 후보자는 신(新)친명(친이재명)계 정치인으로, 김 후보자는 15·16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되며 젊은 스타 정치인으로 떠올랐으나, 제3회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 패배, 16대 대선 당시 정몽준 지지 및 캠프 이적 등을 이후로 정치적 침체를 겪다가 21·22대 총선에서 내리 당선돼 4선 의원이 됐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세비보다 많은 지출, 아빠 찬스 등 의혹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최근 5년간 벌어들인 세비보다 6억원을 더 썼다며, 해명할 자료를 요구했으나 김 후보자는 두번의 출판기념회, 경조사 축의금 및 조의금으로 총당했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통해 김 후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총리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후 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뉴시스

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기로 했다. 김 후보자 인준에 반대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이어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의총 중간에 나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을 강행한다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전투를 위해 전장을 옮길 것”이라며 “줄줄이 강행 예정된 이재명 정권 내각 인사청문회, 국민과 국가의 미래에 해가 되는 부실 정책과 정략적 악법을 철저히 견제하기 위한 야당으로서의 싸움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재계가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도 재석 272인 찬성 220 반대

29 기권 23표로 의결됐다. 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는데, ▲법인 이사의 주주 총실 의무 확대 ▲전자 주주 총회 도입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시 특수관계인 합산 명문화 등이 핵심이다.

여야는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추후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득했

나, 반대의 목소리도 나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의총 중간에 나와 “장기적으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 투자가 많이 일어나고 새 기업이 자주 나오고 경쟁 원리에 맞게 자본가들이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누가 기업을 하려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의 위축도 가져올 수 있다. 유니콘 기업들, 건강하고 이득이 많이 나는 기업들이 자본시장에 상장하려고 하겠나. 안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성 의원은 “대기업은 법무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다. 변호사도 있고 재정적

여력이 있어 큰 포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변호사 채용도 어렵다. 소송에 휩싸일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과학 실험은 잘못하면 지붕이 날라가거나 사람이 다치는데 사회경제적 실험은 국가성장에 심대한 위험요소로 작동할 수 있다”며 “문재인 정권 시절에 해보지도 않은 소득주도성장을 하면서 얼마나 피해를 봤나”라고 반문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후 국회 소통관을 찾아 “이번 상법 개정안은 출발점이고 일부분의 진보이자 개혁이다. 앞으로 더해야 할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더 센 방법은 아직 진행형이다.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 그리고 남아있는 두 가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추가 추진, 그리고 자사주 원칙적 소각 문제는 대통령 공약이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름과 가을에 집중적으로 함께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아울러,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께서 상법 개정 관련 형사법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배임죄와 관련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 논의도 열린 자리에서 서로 함께 논의하고 풀어가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李 대통령, ‘생라이브’ 기자회견에도 막힘없는 답변

취임 한달 첫 기자회견

의정갈등·韓美 관세협상 등
사전조율 없는 질문 15개 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 3일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통상적으로 취임 100일쯤 지나야 첫 기자회견을 하던 전임 대통령들과 달리, 이 대통령은 아주 이례적으로 빠르게 기자들을 만난 셈이다. 이날 회견에선 사전 질문 조율도 없었고, 자리도 ‘사다리타기’로 정해서 임의로 배정받았다. 질문자를 미리 정해놓지도 않았다. 말 그대로 ‘생(生)라이브’ 기자회견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2시간 가량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이 대통령에게 들어간 질문은 총 15개였다. 취임 한 달 소감, 검찰 개혁 시한, 한미 정상회담, 주 4.5일제, 한미 관세협상, 차별금지법, 한일관계, 의료대란 및 의정갈등, 부동산 정책, 지방균형 발전 등 다양하고도 민감한 질문들이었다.

이 대통령은 의정갈등 질문에는 “제가 취임하면서 여러가지 국가 현안에 대해 미리 고심을 안 할 수가 없지 않겠나. 그중에 제일 자신 없는 분야가 바로 의료사태였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바뀌면서 (의료계의) 불신 같은 게 좀 완화된 것 같다”며 “이번 2학기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겠다. 국가적 손실이 매우 크니 빠른 시간 내 대화하고 솔직한 토

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재정을 투입했을 때 소비 승수 효과가 높고, 골목상권 등 지방 경제에 체감되는 효과가 있었다는 정부연구기관의 조사가 있다”면서 “또 한 측면에서 보면 소비진작에 더해 소득지원 효과도 있다. 서민들이 요즘 너무 먹고살기 어렵잖나”라고 대답했다.

다만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믿으면 소비가 좀 늘어나고, 여기에 약간의 마중물을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될 것”이라며 “다시 이걸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을 안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일단은 (또 한번 민생회복지원금을)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또 외신기자에게서 대미(對美) 관세

협상 질문이 나오자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건 분명하다”고 대답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7월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며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히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고 상황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주 4.5일제’를 언제쯤 시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강제로 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할 것이라 오해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갈등·대립이 더 심해서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 발전을 언급하면서 “(수도권에) 새로운 신도시

를 만들 것이냐가 논쟁거리다. 집이 부족하니 그린벨트를 해소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서 (주택을) 공급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고, 지방 입장에서 ‘수도권 집중이 문제돼서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또 신도시를 만들면 수도권 집중을 심화하는 것 아니냐’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신도시를 조성)하기로 한 것은 바꿀 수 없다. 추가로 (신도시를) 새로 만들지는 지방균형 발전,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면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기자회견 말미에 해당 발언이 ‘신도시를 더 만들지 않겠다’로 해석돼, 시장에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취재진의 지적에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는 그대로 해야 한다. 대신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면서도 “이번 대출 규제는 ‘맞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

안철수 혁신위, ‘대선패배 백서 작성’으로 반성·쇄신 나서

작성 완료 후 혁신안 작성 전망
친한계 “고강도 인적 청산안 필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띄운 송부수, ‘안철수 혁신위원회’가 당 혁신을 위해 헤쳐 나가야 할 길이 험준하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 도전설이 흘러나오던 안철수 혁신위원장은 “만약 전당대회가 8월에 마치게 된다면 신임 당 대표와 (혁신위원장 임기가) 접

치게 될 것”이라며 “전대 (총마)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혁신위 업무에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대선 패배 백서 작성’을 혁신위 제1호 업무로 삼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지금의 상황까지 이르게 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대통령 탄핵,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선출한 직후 벌어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의 후보 교체 소동 등에 대한 기록과 평가를 자세하게 기록해 반성과 쇄신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안철수 혁신위는 대선 패배 백서 작성을 완료한 이후 보수 정당이 배출한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을 겪은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혁신안을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놓은 ‘5대 혁신안’을 포함해 검토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 내에

선 김 전 위원장이 내놓은 혁신안도 받지 않았으면서, 안철수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을 수용하겠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3일 SBS라디오에 출연해 “김 전 위원장이 당 대표로서 다섯 가지의 혁신안을 제시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당 대표가 내놓은 혁신안을 거부했는데, 비대위 산하 조직의 장이 내놓은 혁신안을 받아들일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물론 굉장히 말랑말랑한 내용이면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당의 상황을 보면 그리고 안 위원장께서 말씀하

신 대로 고품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메시지를 들겠다고 하면 더 센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안철수 혁신위의 혁신안에는 강도 높은 인적 청산안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지금은 인적 쇄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진 선배들의 차기 총선 불출마 정도는 답이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말 변화와 반성이라는 걸 우리가 설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